"1964년 인화학교 교감 학생 굶겨 살해 암매장"

전직교사 "무등산에 2명 묻었다" 폭로
본보(옛 전남매일) 비행 사실 기사 보도

인화학교의 전신인 옛 전남농아학교에서 40여년 전 학생 2명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이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청각장애 여학생들의 옷을 벗기고 누드화를 그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는 현재 모 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중이다.

17일 오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인화학교 동문 150여 명은 광주시청 앞에서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의 완전 폐쇄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했다. 농아로서 전남농아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김영일(71)씨는 "어린 남자아이가 숨져 가마니에 싸여 있는 것을 봤고 아이를 묻으러 가 내가 직접 땅을 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64년 10월께 고아였던 남자아이(7세 추정)를 교감이 오랫동안 굶기고 때려 숨지게 했다. 아이가 숨지자 가마니에 싸 나와 교감, 다른 교사 1명이 함께 당시 광주 동구 학동에서 7km 정도 떨어진 무등산 기슭에 묻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6개월 후에는 다른 여자아이(6세 추정)를 오랫동안 방에 가두고 밥을 거의 주지 않아 아이가 벽지를 뜯어 먹기도 했다며 "아이를 보육하던 할머니가 아이를 떨어 뜨려 숨지게 했고 역시 암매장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교감이 '너희는 바보라 밥이 필요없다'며 아이들을 굶겨왔다"며 "여자아이 사망 후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직후 교감과 그 형인 학교장이 나를 교내에 가두고 5일 동안 때렸다"며 "경찰과 학교에 계속 피해 사실 확인을 주장했으나 다들 쉬쉬해 1968년께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아이들을 굶기고 구타했던 교감의 사진과 그가 투쟁했던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보여주는 한편 "아이들이 숨진 사실을 아는 1,2회 졸업생들이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이날 그가 공개한 광주일보의 전신인 구 전남매일(1969년4월29일자 4면)은 '농아학생들 또 농성-학교측 비행폭로' 제목의 기사에서 '전남농아학교 학생 70여명은 28일 상오 11시20분 교정에서 학원의 민주화와 악질경영자 추방 등 피켓을 들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 이같은 주장을 방증했다. 학생들은 "정부 및 사회단체와 외원기관에서 보내온 각종 구호품을 음성처분해 경영자가 착복했다"는 등 5개 항목의 비행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씨 외에도 많은 졸업생이 나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인권 유린을 폭로했다.

인화학교 졸업생인 광주농아인협회 강복원 회장은 "1975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인화학교 이사장의 셋째 아들이 재학 중인 청각장애 여학생 2명의 옷을 벗기고 누드화를 그렸다"며 "그 셋째 아들은 현재 광주의 한 일반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지난 1960년대 인화학교의 전신인 전남농아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김영일씨(오른쪽)가 17일 광주시청 앞에서 "학교 측이 학생 2명을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고 폭로하며, 당시 신문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추 지지대 철근 훔쳐 벤츠 몰고 다닌 도둑들

남구 등서 110차례 절도 외삼촌·조카 덜미

광주와 전남·북 일대에서 농업용 자재를 싹쓸이한 돈으로 벤츠 스포츠카를 구입해 부자행세를 해 온 조카와 외삼촌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7일 심야시간대 농촌에서 철근과 양수기 등 농업용 자재를 훔친 김모(34·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도운 외삼촌 정모(38)씨를 같은 혐의로, 이들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고모(55)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정씨는 지난 6월5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남구 화장동 최모(여·66)씨의 비닐하우스에서 120만원 상당의 고추지지대용 철근 1000개를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나주, 담양, 순창, 남원지역 농촌에서 총 110여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농업용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들이 훔쳐 온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낮은 가격에 매입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과거 농촌에서 일당을 받고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농민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1t 화물차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압수한 고추 지지대용 철근〈위〉과 절도범들이 타고다닌 고급 외제 스포츠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특히 김씨 일당은 농업용 자재를 판 돈으로 벤츠 스포츠카를 구입해 타고다니면서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광주시 남구 일대에서 절도 피해가 잇따르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 범행에 이용된 화물차와 족적을 확인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

나원참 〈8418〉 김종두

근로정신대 연금 99엔 재심사 청구 기각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반발해 낸 재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7일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가 최근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심사회는 물가인상률을 환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김호기자 kimho@

회사 거저 먹으려한 조폭

규석 광업소 강탈 시도 前 행동대장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광업소 운영에 개입해 회사를 빼앗으려 한 모 폭력조직 전 행동대장 A(52)씨에 대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실상 회사를 빼앗는 내용의 협약서 날인을 종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강진군 의원 B(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생태환경 지킴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강진에 있는 모 광업소와 관련한 생태·환경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뒤 광업소 대표에게 불평등한 권리 관계가 정리된 협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약은 'A씨의 사무실 임대비, 직원 4명 급여를 지불한다', '허가없이 광업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억원을 지급한다'는 등 사실상 회사를 빼앗는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광업소는 연매출 50억원 규모로 규석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출받게 해주겠다" 새터민 5명 등쳐

쌍나팔

○…여수경찰은 17일 새터민(탈북주민)을 상대로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38)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

○…손씨 등은 지난 4월 새터민 C씨에게 은행에서 저리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접근해 7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새터민 5명으로부터 모두 2억7000만원을 편취.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조선대교수 이메일 해킹 기무사 간부 2명 구속

軍 주내 결과 발표

현역 군 장교들이 연루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의 조사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 조사본부에서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관련자의 자백과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고 지난 17일 말했다.

군 당국은 용의자로 지목된 기무사 장교 2명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모두 구속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해킹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들은 피해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 이를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엉터리 관리' 양육시설 원장 교체 지시

광주시 동구

광주시 동구는 성폭력 사건과 원생간 폭행사건이 잇따라 물의를 빚은 아동양육시설〈광주일보 10월 17일 6면〉의 원장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관리 · 감독 기관은 운영할 필요가 없는 시설은 폐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 해도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등에는 한차례에 한해 시설폐쇄 대신 시설장 교체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구는 성폭력 사건 재발에 대비해 전체 46명 원생 가운데 초등학생 4명, 중학생 4명 등 여학생 8명을 여자아동시설이나 그룹홈으로 옮기도록 했다.

동구는 또 주의력 결핍, 심리적 불안감 등 증세를 보인 원생들에 대한 관리·치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